

생애주기 관점에서 중·고령자 가구주 가구의 소득변화 및 노후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 재 호*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내용은 첫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고령자가구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인빈곤을 완화효과를 살펴본다. 둘째, 인구학적으로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지난 10년간의 빈곤율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성장과 재분배에 따른 빈곤율변화를 각 연령대별로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에 빈곤층이 되기 전에 중·고령기에 이미 소득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특히 55~64세의 경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빈곤율 상승은 경제활동상태와 연계되어 있어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해 중·고령기의 경제활동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중·고령기에 공적연금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전체 빈곤율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했으며, 소득재분배는 성장효과에 비해 낮았지만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인구고령화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수급자수 증가와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기초연금액을 고려하면 OECD 수준의 노인빈곤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I. 들어가는 글

OECD의 『2015 Pension at a Glance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도 우리처럼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냈지만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Smeeding et al, 2001; Williamson & Smeeding, 200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넓고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들이 아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대상(18세이상 59세)의 50.6%만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며 49.4%(2014.12 기준)는 가입에 배제되어 있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책임연구원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1999년에서야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었지만, 도입이전에 노후를 맞이한 고령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 가입을 했더라도 납부기간이 짧아 연금지급액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노령연금지급이 시작되어 2016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수급자수는 약 393.6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평균노령 연금지급액 360,780원 수준이다¹⁾.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전체 수급자 중에서 노인수급자 비율이 2009년 26.2%, 2010년 26.8%, 2011년 27.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30.6%를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 각년도).

공적연금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공적부조차원에서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달 일정액(2014년 기준 99,000원)을 지급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지급액이 20만원으로 확대되었다²⁾. 그러나 이처럼 노인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여전히 50%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 39%까지 10%p를 낮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연금수급자의 확대와 기초연금도입을 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증가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48.1%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44.8%로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도입이후 1999년 가입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된 이후 가입자가 10년의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부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빈곤율과 불평등 시계열적인 수치만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감소효과를 예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공적연금의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적 시점간의 자산축적과 그에 따른 소득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국민연금자산을 비롯한 많은 자산을 축적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수급자의 확대와 기초연금도입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득증대 효과가 사적이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수급전 중·고령기의 소득구성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둘째, 인구학적으로 이전의 노인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평가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크게 넘어오면서 노인빈곤율이 완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롭게 노인층으로 넘어온 베이비부머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이전의 노인들보다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인구수가 높아 노인빈곤율을

1)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할 경우 490,420원이며 장애연금 433,220원, 그리고 유족연금은 261,710원이다.

2) 기초노령연금액은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당해 7월에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 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되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을 수급하고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완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셋째, 최근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노동시장의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 정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시기가 60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도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다³⁾. 이처럼 은퇴와 수령시기간의 공백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은 가구의 경제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들의 빈곤은 현재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생애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 경험이나 그 동안 축적한 경제적 노후 준비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경제적 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인이 되기 이전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의 경우 아직 공적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면서 가구소득의 변화가 증가에서 감소로 줄어들지만 지출은 여전히 증가하면서 가계순자산의 감소가 나타나 노후에 사용할 자산이 점차 줄어든다. 즉 중·고령기의 순자산의 변화가 노후에 빈곤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적연금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동안 축적한 자산, 노인인구비율, 그리고 노인고용시장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고령자가구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인빈곤율 완화효과를 살펴본다. 둘째, 인구학적으로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지난 10년간의 빈곤율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성장과 재분배에 따른 빈곤율변화를 각 연령대별로 살펴본다.

II.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불평등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악화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소득불평등의 지속적인 악화는 모든 연령층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병인·전승훈(2005)의 연구에서는 1998~2002년의 기간에 걸쳐 연령별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집단의 소득이 비노인집단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노인집단의 불평등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아(2008)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전체 노인가구 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내 노년층 가구의 불평등 정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 및 독인가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있는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2006년의 경우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돈(2009)은 한국노동패

3) 1953~56년생은 61세부터, 1957~60년생은 62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널 2차(1999년), 5차(2002년), 7차(2004년), 9차(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강성호·임병인(2009)의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의 미수급 노인 계층에 비해 수급노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았으며, 부부기준으로 추정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분배 상태 및 양극화 정도 역시 수급노인이 미수급 노인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본 연구로는 김희삼(2010)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빈곤의 규모(빈곤율)와 심도(빈곤갭)는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으나 2008년에 지출된 기초노령연금 중 절반 정도만이 빈곤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빈곤감소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소득이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 가구에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초노령연금이 다른 공적이전소득을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상훈(2010)은 가계동향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빈곤감소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노인빈곤율 감소효과(8.7~11.0%)보다 빈곤갭 감소에 효과(19.6~25.7%)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강성호·최옥금(2010)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탈빈곤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나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후의 빈곤상태의 결정요인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소득변화에서 찾는 기존의 연구들로 김대철·권혁진(2007)은 2006년 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변화가 노후빈곤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보다 약 40% 정도 빈곤완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수준을 50%이하로 인하하는 경우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할 경우 이런 노후빈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노령연금의 폐지는 20년 미만의 가입자에게 추가급여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상훈(2010)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8.7~11.0%의 빈곤율 감소효과와 19.6~27.7% 정도의 빈곤갭 감소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확대보다는 선별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II. 노인가구소득과 공적연금수급 현황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48.1%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44.8%로 크게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근로연령인구의 불평등도는 줄어들지만 노인인구에서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13년 이후 노인인구의 불평등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도입이후 1999년 가입대상자를 전국민으로 확대된 이후 가입자가 10년의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고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후부터 공적연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 도입되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14년 기준 99,000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14년 7월부터 20만원으로 확대된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공적연금의 실질적 노인빈곤완화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2> 노인빈곤율과 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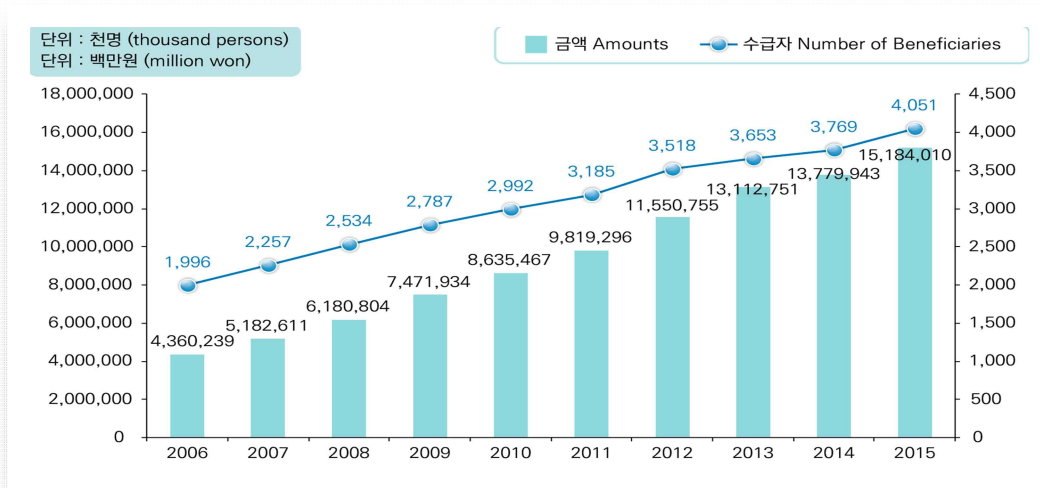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단위 : %)		
	전 체	근로연령인구 (18~65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전 체	근로연령인구 (18~65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06	0.306	0.295	0.390	14.3	11.1	42.8
2007	0.312	0.299	0.397	14.8	11.1	43.6
2008	0.314	0.300	0.403	15.2	11.5	44.1
2009	0.314	0.300	0.404	15.3	11.5	45.9
2010	0.310	0.297	0.411	14.9	11.3	46.3
2011	0.311	0.294	0.420	15.2	10.8	47.6
2012	0.307	0.287	0.433	14.6	10.0	47.2
2013	0.302	0.280	0.420	14.6	9.6	48.1
2014	0.302	0.281	0.396	14.4	9.3	47.4
2015	0.295	0.273	0.380	13.8	8.5	44.8

자료: 통계청(KOSIS), 2016.9.14.일 추출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급여지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지급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수급자는 2,534천명에서 2015년 4,051천명으로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6조 1,808억원에서 2015년 15조1,8184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전체 평균급여액(특례제외)은 323,280원(412,970원)으로 노령연금은 334,410원(478,180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869,800원, 10년 이상~20년 미만가입자는 408,260원 수준이다. 수급자 중 20년 이상이 4.4%(2013년)→4.9%(2014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5.3%(2013년)→27.0%(2014년)로 각각 늘어나고 있지만, 특례(10년 미만)노령연금의 수급자 비중은 55.7%(2013년)→52.7%(2014년)로 감소했다. 향후 10년 이상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이 증가하고 수급자수도 늘어 노인빈

곤을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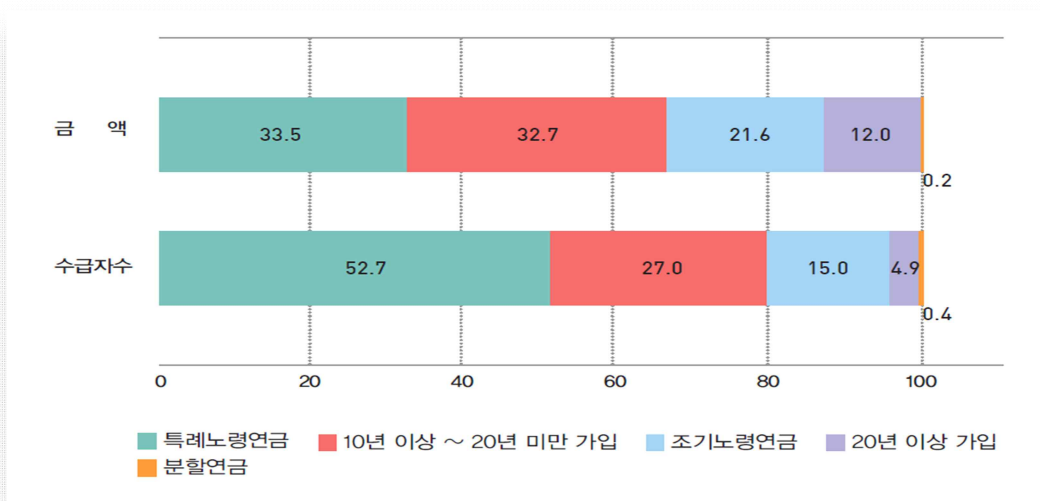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급여지급액 및 수급자 현황



출처: 『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림 2] 노령연금종별 급여지급액 및 수급자 대비 비중

(단위:%)



주: 1. 2013년 말 기준 수급자비중은 분할 0.3%, 20년 이상 4.4%, 초기 14.3%, 10년 이상~20년 미만 25.3%, 특례(10년 미만) 55.7% 임.

출처: 『2015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IV. 자료 및 변수

1. 자료: 『한국노동패널』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KLIPS)』로⁴⁾, 소득, 소비, 그리고 저축은 전년도에 대한 상태를 조사하고 자산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다. 그러다 보니 발표된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경제변수의 시점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2016년 현재 발표된 18차 자료는 지난 2015년 조사된 자료로 소득, 소비, 그리고 저축은 2014년의 상태이며 부동산 및 금융 등에 대한 자산은 2015년에 해당된다.

<표 3> 노동패널 변수별 조사시점

발표	8차	13차	18차
조사시점	2005년	2010년	2015년
소득	2004년	2009년	2014년
소비			
저축			
자산	2005년	2009년	2015년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 등			

2.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조사된 2009년, 2014년의 소득, 소비, 그리고 저축과 관련된 변수들로 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에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에 해당되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한다⁵⁾. 소비는 월평균소득에 12개월을 곱해 연간 소비를 도출했다.

4) 『한국노동패널(KLIPS)』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 거주 가구의 노동시장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1998년 첫 조사가 시행되었다. 2009년부터는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였다.

5) 3차 년도 자료는 소득 및 자산의 구성이 이후자료들과 달라 변수의 연계성을 위해 8차 년도 자료부터 10년간의 변화를 추적한다.

<표 4> 노동패널 소득구성

소득종류		노동패널	시장소득	총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1.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투자소득 2.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3. 주식/채권 매매차익 4. 배당금 5. 기타			
	부동산소득	1. 월세 등 임대료 2. 부동산 매매차익 3. 토지를 도지준 것 4. 권리금 5. 기타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3. 사회단체 보조금 4. 친척/친지 보조금 5.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6.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 7. 기타			
	사회보험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사학/공무원/군인연금),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특례노령연금, 기타			비소비지출 (직접세+사회보험료)
	정부보조금	1.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2. 기타 정부보조금 + 근로장려세제			
기타소득		보험금(손해, 저축성, 종신), 퇴직금, 증여/상속, 축의금/조의금, 당첨상금, 재해 보상금, 기타			

주: 작년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세금을 제외한 후 응답

IV. 실증방법

1.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소득변화

가. 연령대별 및 소득원천별 빈곤율 변화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Foster, Greer, and Thorbecke이 제안한 FGT지수⁶⁾를 사용하여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의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평등도를 살펴본다. FGT 지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hat{P}(z; \alpha) = \frac{\sum_{i=1}^n w_i (z - y_i)_+^\alpha}{\sum_{i=1}^n w_i}$$

단, z : 빈곤선, $x_+ = \max(x, 0)$,

w_i : 관측치 i (가구)의 표본가중치와 관측치 i 의 규모(가구원수)를 곱한 값

y_i : 관측치 i 의 소득(가처분소득)

FGT지수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0~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규화 하여 제시하며, 정규화한 FGT 지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hat{\bar{P}}(z; \alpha) = \hat{P}(z; \alpha) / (z)^\alpha$$

FGT 지수는 모수 α 값에 따라 빈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즉, $\alpha = 0$ 일 때는 빈곤율(headcount ratio)을 의미하며, $\alpha = 1$ 일 때는 빈곤율과 정규화된 빈곤갭 비율의 곱으로 표현된 빈곤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때 소득 y 를 K 개의 소득원천으로 분리할 경우, 각각의 소득원천을 S_k 라 하면, 표본을 통해 추정된 FGT 지수는 또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hat{P}(z; \alpha; y = \sum_k S_k) = \frac{\sum_{i=1}^n w_i (z - y/z)_+^\alpha}{\sum_{i=1}^n w_i}$$

여기에서 소득원천 S_k 의 빈곤완화 효과는 최초소득에 그 소득원천이 추가될 때 발생하는 빈곤의 완화 정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표본을 구성하는 각 집단별로 FGT지수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6) FGT 지수는 단조성 공리와 이전민감성 공리, 그리고 가법성 공리를 만족할 뿐 아니라, 소득원천별-인구집단별 분해에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hat{P}(z; \alpha) = \sum_{g=1}^G \hat{\phi}(g) \hat{P}(z; \alpha; g)$$

$\hat{P}(z; \alpha; g)$: 표본의 하부집단의 FGT지수

$\hat{\phi}(g)$: 추정된 하부집단의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hat{\phi}(g) \hat{P}(z; \alpha; g)$: 총빈곤율에 대한 하부집단의 절대적 기여도

$\hat{\phi}(g) \hat{P}(z; \alpha; g) / \hat{P}(z; \alpha)$: 총빈곤율에 대한 하부집단의 상대적 기여도

(2) 분석결과

① 연령대별 빈곤율 변화

2004년 가구주의 인구구성비는 40~44세가 16.8%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은 2009년 15.8%, 2014년 17.2%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가구주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4년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다 50~54세 사이에 10.7%로 잠시 낮아지지만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ndo &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빈곤율이 점차 낮아지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 6>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주가구에 대한 높은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치중하고 사회보험 및 공사적이전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50~64세 중·고령층의 빈곤율 증가는 노동시장의 이탈 또는 재진입에 따른 가구소득의 변화가 높은 빈곤율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 가구빈곤율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9년은 2004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2014년 역시 2009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60~64세(24.2%→21.0%→14.2%), 65~69세(36.5%→29.5%→23.6%), 70~74세(55.5%→48.7%→40.1%)의 전기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은 2004년에 비해 2009년과 2014년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70~74세의 경우 3기간 동안 빈곤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면서 65~69세에 비해 크게 낮아져 노인빈곤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코호트별로 추적해서 살펴보면, 2004년 50~54세(10.7%→10.3%→14.2%), 55~59세(17.0%→21.0%→23.6%), 60~64세(24.2%→29.5%→40.1%), 65~69세(36.5%→48.7%→51.8%)로 각 코호트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코호트일수록 고령의 코호트보다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진입자의 빈곤율이 낮아져 향후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가구주연령대별(5세별) 빈곤율 및 기여도

연도	2004			2009			2014		
구분	빈곤율	인구구 성비	상대적 기여율	빈곤율	인구구 성비	상대적 기여율	빈곤율	인구구 성비	상대적 기여율
전체	18.5	100.0	100.0	17.2	100.0	100.0	14.0	100.0	100.0
35세 미만	9.3	9.0	4.5	9.7	9.8	5.5	7.1	9.6	4.8
35~39세	12.5	13.9	9.4	8.6	11.0	5.5	6.4	9.2	4.2
40~44세	15.0	16.8	13.7	11.4	13.8	9.1	7.4	12.2	6.4
45~49세	16.0	16.5	14.3	11.4	15.8	10.4	9.9	15.0	10.5
50~54세	10.7	13.6	7.8	12.4	14.7	10.6	9.7	17.2	11.8
55~59세	17.0	10.2	9.4	10.3	10.4	6.2	10.1	13.8	9.9
60~64세	24.2	7.7	10.1	21.0	8.2	10.0	14.2	7.8	7.9
65~69세	36.5	6.2	12.1	29.5	6.4	11.0	23.6	5.4	9.0
70~74세	55.5	3.3	9.8	48.7	5.4	15.3	40.1	3.9	11.0
75~79세	62.4	1.7	5.8	60.1	2.8	9.6	51.8	3.3	12.0
80세 이상	49.2	1.2	3.1	65.4	1.8	6.7	66.5	2.7	12.5

주: 본 연구의 연령대별 인구구성비는 가구주의 연령대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전체 인구구성비와 정의상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구성비의 차이가 있음

② 소득원천별 빈곤율 변화

<표 5>의 연령대별 빈곤율의 변화를 소득원천별로 살펴보기 위해 <표6>의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천별 점유율과 빈곤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의 점유율은 2004년 91.6%에서 2009년 91.9%, 2014년 94.6%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금융소득은 2009년 이후, 부동산소득은 2004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소득은 2004년 1.4%에서 2009년 2.2%, 2014년 2.1%로 늘어났고 공적이전소득은 2004년 0.3%에서 2009년 0.8%, 2014년 1.2%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2.4% 내외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보험료지출은 2004년 4.4%에서 2009년 5.0%, 2014년 6.0%로 가계의 사회보험료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⁷⁾.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고령기에 해당하는 50~64세 근로소득의 점유율과 상대적 기여율의 경우 2004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 기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50~64세 연령대 가구주는 주로 소득원천으로 근로소득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자의적 또는 타의적 이탈은 가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표5>에서 50~64세의 빈곤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별다른 소득원이

7) 사회보험료와 함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조세는 본 조사에서 세후소득을 조사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되어 있지 않다.

없는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만 특별한 소득지원정책의 부재로 노인빈곤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65~79세 노인층에서는 근로소득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상대적 기여율은 높아져 전기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노인경제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수급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비노인가구에 비해 사회보험소득의 비율이 높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그 비율은 낮지만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적이전소득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지만 점유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 기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가구의 근로소득은 50%대로 매우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부동산소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사회보험소득의 점유율은 65~79세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점차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공적이전소득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점유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연령대별 소득원천별 점유율 및 상대적기여율 추이

연도		2004		2009		2014	
구분	소득종류	점유율	기여율	점유율	기여율	점유율	기여율
전체	근로소득	91.6	89.3	91.9	90.7	94.6	91.6
	금융소득	1.0	0.7	1.1	0.8	0.6	0.4
	부동산소득	6.0	3.3	3.9	2.5	3.8	2.2
	사회보험소득	1.4	1.8	2.2	2.5	2.1	2.3
	공적이전소득	0.3	0.5	0.8	1.0	1.2	0.6
	사적이전소득	2.4	2.4	2.5	2.3	2.5	1.8
	기타소득	1.5	0.7	2.6	1.0	1.4	0.7
	사회보험료	-4.4	-0.4	-5.0	-0.7	-6.0	-0.6
35세 미만	근로소득	100.3	96.1	95.8	96.1	95.2	96.3
	금융소득	0.5	0.1	0.4	0.3	0.4	0.3
	부동산소득	0.5	0.4	1.7	0.6	1.6	1.0
	사회보험소득	0.1	0.0	0.5	0.2	0.2	0.2
	공적이전소득	0.1	0.0	0.8	0.3	2.5	0.4
	사적이전소득	3.6	1.9	4.5	2.3	4.2	1.1
	기타소득	0.9	0.8	2.1	0.7	2.1	0.8
	사회보험료	-5.0	-0.3	-5.7	-0.5	-6.3	-0.4
35~49세	근로소득	95.4	93.3	97.5	95.9	99.7	96.3
	금융소득	0.9	0.5	1.0	0.6	0.5	0.3
	부동산소득	3.5	1.9	1.8	1.3	2.1	0.9
	사회보험소득	0.3	0.4	0.3	0.4	0.4	0.3
	공적이전소득	0.3	0.6	0.5	0.5	1.1	0.4
	사적이전소득	2.4	1.4	2.2	1.4	2.1	1.1
	기타소득	1.8	0.6	2.1	0.7	0.8	0.3
	사회보험료	-4.6	-0.3	-5.5	-0.7	-6.5	-0.5
50~64세	근로소득	89.4	88.6	90.4	90.2	95.4	92.0
	금융소득	1.3	0.9	1.3	1.0	0.7	0.5
	부동산소득	8.5	4.4	4.9	3.1	3.9	2.6
	사회보험소득	1.8	2.1	2.9	3.2	1.9	1.9
	공적이전소득	0.2	0.3	0.6	0.9	0.7	0.3
	사적이전소득	1.1	1.4	1.4	1.3	1.4	1.0
	기타소득	1.5	1.0	3.2	1.1	2.0	1.1
	사회보험료	-4.1	-0.6	-4.7	-0.7	-5.9	-0.7
65~79세	근로소득	70.0	63.6	67.3	70.0	64.0	70.8
	금융소득	1.5	1.5	1.2	1.3	1.3	0.8
	부동산소득	15.5	10.2	12.3	6.7	12.8	5.9
	사회보험소득	8.3	11.2	10.6	10.2	14.2	13.1
	공적이전소득	1.2	1.2	2.8	2.8	3.0	2.6
	사적이전소득	6.7	11.5	7.4	8.3	7.0	6.6
	기타소득	0.3	0.2	1.7	1.6	1.2	0.9
	사회보험료	-3.5	-1.0	-3.3	-1.1	-3.4	-1.1
80세 이상	근로소득	53.0	51.2	51.6	49.8	58.4	54.0
	금융소득	1.2	0.6	1.8	1.8	0.6	0.8
	부동산소득	21.9	12.6	16.6	10.2	14.8	7.7
	사회보험소득	8.8	10.8	10.1	12.0	11.9	18.7
	공적이전소득	2.8	3.0	6.0	7.8	4.5	4.0
	사적이전소득	13.2	16.5	11.2	15.9	13.5	15.0
	기타소득	0.1	0.0	6.7	3.6	0.3	0.2
	사회보험료	-3.1	-0.2	-4.0	-1.1	-4.0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연령대별 및 소득원천별 불평등도 변화

(1) 분석방법

지니계수(Gini index)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화된 지표로 절대적 평등선인 45도선과 로렌즈 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 즉 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이 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된다.

$$Gini = 1 - \sum_{i=1}^n (y_i + y_{i+1})(n_{i+1} - n_i)$$

이를 전체 표본의 하부집단별로 분해하여 각 하부집단이 전체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기 위해 지니계수를 각 집단별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Gini = \sum_{g=1}^G \phi_g \varphi_g I_g + \bar{I} + R$$

ϕ_g 는 하부집단 g 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φ_g 는 하부집단 g 가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여가지출 점유율, \bar{I} 는 집단간의 불평등도(between - group inequality), 그리고 R 은 잔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집단 g 가 전체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φ_g 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2) 분석결과

각 소득원천별 비율(X)과 집중화지수(Y)를 곱해 도출한 절대적기여도(X*Y)가 전체 불평등도(Z)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적 기여도(X*Y/Z)라고 하며, 이를 소득원천별 비율(X)로 나누어 상대적 불평등도(Y/Z)를 도출한다.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1보다 작으면 전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평등함을 의미하고, 반대로 1보다 크면 전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또한 부호가 음으로 표시된 소득원천은 최종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소득원천은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2004년 2.274에서 2009년 2.380, 2014년 2.710으로 1보다 커서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며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변화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지만 사적이전소득은 1보다 작은 양의 값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사적이전은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차 불평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

가 높아질 수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80세 이상에서도 1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50~64세의 중·고령자 근로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 역시 2004년 2.121에서 2009년 2.283, 2014년 2.687로 1보다 크고 점차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65~79세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크기는 2004년에 0.509에 비해 2009년 0.466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4년에 0.624로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소득은 2004년의 0.082에 비해 2009년에 0.157, 2014년에 0.241으로 1보다 작아 불평등도는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차 크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의 수급자수가 많지 않고 급여액도 높지 않아 불평등도는 높지 않지만 20년 이상의 수급자수가 점차 늘어나 급여액과 수급자수가 증가하면서 불평등도는 더 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이전소득도 2004년 -0.063으로 불평등도를 완화하다가 2009년 0.010, 2014년 0.034로 규모는 작지만 불평등도를 확대시키고 있다.

80세 이상에서는 2004년 부동산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0.7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2009년 0.457, 2014년 0.386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회보험소득 역시 2004년 0.201에서 2009년 0.177, 2014년 0.140으로 1보다 낮고 점차 줄어들어 불평등도도 낮지만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도도 2004년 -0.036에서 2009년 -0.021, 2014년 -0.028로 80세 이상 가구주가구의 불평등도를 낮추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7> 연령대별 소득원천별 불평등도(집중지수) 및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추이

연도		2004		2009		2014	
구분	소득종류	불평등도 (집중지수)	상대적 불평등도	불평등도 (집중지수)	상대적 불평등도	불평등도 (집중지수)	상대적 불평등도
전체	근로소득	0.363	2.274	0.360	2.380	0.333	2.710
	금융소득	0.440	0.032	0.581	0.047	0.481	0.026
	부동산소득	0.727	0.302	0.674	0.190	0.725	0.235
	사회보험소득	0.087	0.008	0.083	0.013	0.007	0.001
	공적이전소득	-0.514	-0.012	-0.322	-0.019	-0.093	-0.010
	사적이전소득	0.077	0.012	0.157	0.028	0.179	0.038
	기타소득	0.759	0.078	0.796	0.148	0.666	0.082
	사회보험료	0.268	-0.081	0.286	-0.104	0.292	-0.150
35세 미만	근로소득	0.323	3.135	0.291	2.687	0.275	2.764
	금융소득	0.644	0.032	0.529	0.020	0.203	0.009
	부동산소득	0.553	0.027	0.828	0.134	0.905	0.149
	사회보험소득	0.425	0.004	0.113	0.005	0.115	0.003
	공적이전소득	-0.599	-0.003	-0.138	-0.011	0.280	0.075
	사적이전소득	0.050	0.013	0.559	0.241	0.474	0.210
	기타소득	0.284	0.025	0.734	0.150	0.802	0.178
	사회보험료	0.248	-0.120	0.223	-0.123	0.211	-0.141
35~49세	근로소득	0.336	2.451	0.324	2.650	0.286	3.186
	금융소득	0.451	0.030	0.718	0.062	0.633	0.033
	부동산소득	0.746	0.201	0.687	0.104	0.784	0.186
	사회보험소득	0.073	0.002	-0.119	-0.003	-0.179	-0.007
	공적이전소득	-0.565	-0.013	-0.336	-0.014	-0.069	-0.009
	사적이전소득	0.403	0.075	0.390	0.072	0.343	0.082
	기타소득	0.834	0.110	0.810	0.145	0.611	0.051
	사회보험료	0.258	-0.092	0.253	-0.117	0.250	-0.180
50~64세	근로소득	0.351	2.121	0.342	2.283	0.319	2.687
	금융소득	0.486	0.043	0.553	0.053	0.485	0.031
	부동산소득	0.738	0.432	0.678	0.246	0.680	0.234
	사회보험소득	0.162	0.020	0.141	0.030	0.082	0.013
	공적이전소득	-0.428	-0.007	-0.222	-0.010	0.102	0.006
	사적이전소득	-0.236	-0.017	0.086	0.009	0.174	0.022
	기타소득	0.683	0.071	0.815	0.194	0.663	0.119
	사회보험료	0.230	-0.064	0.255	-0.089	0.266	-0.138
65~79세	근로소득	0.524	1.668	0.478	1.685	0.412	1.675
	금융소득	0.186	0.013	0.241	0.015	0.369	0.030
	부동산소득	0.716	0.509	0.724	0.466	0.774	0.624
	사회보험소득	0.224	0.082	0.283	0.157	0.267	0.241
	공적이전소득	-0.334	-0.018	-0.195	-0.029	-0.202	-0.039
	사적이전소득	-0.203	-0.063	0.027	0.010	0.077	0.034
	기타소득	0.181	0.002	0.559	0.050	0.568	0.045
	사회보험료	0.398	-0.063	0.384	-0.066	0.411	-0.090
80세 이상	근로소득	0.530	1.196	0.599	1.157	0.664	1.275
	금융소득	0.405	0.020	0.301	0.020	0.136	0.003
	부동산소득	0.764	0.717	0.737	0.457	0.794	0.386
	사회보험소득	0.536	0.201	0.470	0.177	0.359	0.140
	공적이전소득	-0.345	-0.036	-0.092	-0.021	-0.188	-0.028
	사적이전소득	-0.002	-0.001	0.017	0.007	0.273	0.121
	기타소득	-0.010	0.000	0.898	0.226	0.218	0.002
	사회보험료	0.497	-0.063	0.596	-0.090	0.656	-0.086

2. 인구변화 및 재분배정책을 고려한 빈곤율 분해

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빈곤율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시점에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 대한 기여도를 분해는 정태적인 분석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빈곤율의 추이가 연령대별 경제적 상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노인인구와 비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진입하는 노인들 중에는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수준을 갖춘 집단들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별 인구비율에 따른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분해(sectoral decomposition)를 통해 전체 빈곤변화를 발생시키는 집단내 그리고 집단간 인구구성의 상대적 기여도를 도출하여 빈곤율 추이의 원인을 규명한다.

집단별 분해(sectoral decomposition)는 Ravallion and Huppi(1991)가 소개하고 Duclas and Araar(2006)에 의해 발전시켰으며 전체 빈곤변화를 발생시키는 집단내(연령대) 그리고 집단간(연령대별) 인구구성의 상대적 기여도를 도출할 수 있다. 집단별 분해는 집단내(inter-sectoral component), 집단간(intra-sectoral component), 그리고 교호항(interaction component)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집단내 요인은 집단내의 소득수준변화에 따른 빈곤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각 집단에서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빈곤변화를 나타내며, 집단간 요인은 인구구성비가 최초의 비교시점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두 시기의 소득수준의 변화가 전체 빈곤율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교호항은 집단내의 인구구성과 빈곤수준의 변화에 따른 빈곤변화를 의미한다. Ravallion and Huppi(1991)에 따르면 교호항은 집단 간 빈곤변화와 인구구성의 상관관계로 해석된다.

$$\begin{aligned}\overline{P}_B(z; \alpha) - \overline{P}_A(z; \alpha) = & \textcircled{1} \sum_k^K \phi_A(k) (\overline{P}_B(k; z; \alpha) - \overline{P}_A(k; z; \alpha)) \\ & + \textcircled{2} \sum_k^K \overline{P}_A(k; z; \alpha) (\phi_B(k) - \phi_A(k)) \\ & + \textcircled{3} \sum_k^K (\overline{P}_B(k; z; \alpha) - \overline{P}_A(k; z; \alpha) (\phi_B(k) - \phi_A(k)))\end{aligned}$$

빈곤율의 변화= ① 각집단내의 소득수준의 효과(within-group poverty effects) +
② 인구학적 효과(demographic or sectoral effects) +
③ 교호효과 또는 오차항(interaction or error term)

<표 8> 연령대별 집단별 분해(2004년 기준)

연대		2004	2009		2014	
빈곤율		18.18	17.24		14.0	
연령대		인구비율	빈곤율 변화(A)	비중(A/B)	빈곤율 변화(A)	비중(A/B)
소득변화	~34세	8.92	0.0475	-5.06	-0.1822	4.35
	35~49세	47.19	-1.7483	186.26	-2.9708	70.85
	50~64세	31.56	-0.601	64.03	-1.6209	38.66
	65~79세	9.42	-0.3859	41.11	-1.127	26.88
	80세~	2.92	0.1989	-21.19	0.0862	-2.06
	소계	100.00	-2.4889	265.15	-5.8147	138.68
인구구성			1.3217	-140.81	1.227	-29.26
교호항			0.2285	-24.34	0.3949	-9.42
합계			-0.9386(B)	100.00	-4.1928	100.00

2004년 전체 빈곤율 18.18%를 기준으로 2009년 17.24%(- 0.94%p), 2014년 14.0%(-4.19%p)로 2004년과 2009년간의 빈곤율변화는 각 연령대의 소득변화에 따른 빈곤율변화의 합(- 2.49%p, -5.81%p), 인구변화에 따른 빈곤율변화(1.32%p, 1.23%p), 교호항(0.23%p, -4.19%p)의 합으로 구성된다. 동기간동안 빈곤율감소가 소득증가에 따른 효과에 기인하며 인구변화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증가에 따른 빈곤율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5세 미만과 80세 이상에서는 빈곤율이 증가했고 35~49세에서 1.75%p의 가장 높은 감소효과를 나타냈으며 50~64세의 중·고령자는 0.60%p의 감소, 65~79세는 0.39%p의 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빈곤율이 4.2%p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소득변화는 5.81%p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인구구성은 1.23%p의 증가를 가져와 인구고령화가 빈곤율에 음의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빈곤율의 성장과 재분배 분해

시계열적으로 빈곤변화의 원인이 성장인지 불평등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성장과 불평등이 같은 방향으로 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빈곤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국가 또는 지역간의 빈곤차이가 불평등의 차이인지 평균소득수준의 차이인지 알고 싶어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간의 빈곤차이가 불평등의 차이인지 평균소득수준의 차이인지 규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소득의 차이(성장) 또는 소득불평등의 차이(분배)가 시계열간 빈곤차이의 원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기간의 분포 *A*와 *B*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일한 평균을 갖도록 분포 *A*와 *B*를 조정하여 조정된 두 분포간의 빈곤차이를 불평등의 차이에 따른 빈곤의 효과

로 해석한다. 두 번째, 분포 A 와 분포 B 의 평균소득에 맞게 조정된 분포 A' 의 차이는 평균소득의 차이의 빈곤차이의 효과로 해석한다. Datt and Ravallion(1992)은 두 기간의 FGT지수를 성장과 재분배로 다음과 같이 분해했다.

$$P_{t+n} - P_t = ①(P_{t+n}^* - P_t) + ②(P_{t+n}^{**} - P_t) + R$$

①은 성장효과로 t 기의 로렌즈커브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가구소득의 변화에 따른 빈곤율변화를 의미하고 ②는 재분배효과로 t 기의 가구소득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로렌즈커브의 이동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2004년을 기준으로 2009년의 빈곤율변화를 성장과 재분배효과로 분해하면 <표9>와 같다.

<표 9> 연령대별 빈곤율 성장과 재분배효과분해(2004년 기준)

(단위: %, %p)

구분		빈곤율		차이 (C=B-A)	성장효과 (D)	재분배효과 (E)
		2004(A)	2009(B)			
2004- 2009년	전체	0.181781	0.114658	-0.067123	-0.05849	-0.01018
	~34세	0.091543	0.068685	-0.022858	-0.03097	0.00761
	35~49세	0.143907	0.062160	-0.081747	-0.05743	-0.02549
	50~64세	0.157417	0.083159	-0.074258	-0.05542	-0.02031
	65~79세	0.423614	0.270238	-0.153376	-0.12510	-0.03170
	80세~	0.553227	0.507910	-0.045317	-0.07678	0.02299
	65세 이상	0.454246	0.335990	-0.118256	-0.20824	-0.01445
구분		빈곤율		차이 (C=B-A)	성장효과 (D)	재분배효과 (E)
		2004(A)	2014(B)			
2004-2014	전체	0.181781	0.053844	-0.127937	-0.08699	-0.04227
	~34세	0.091543	0.023679	-0.067864	-0.02805	-0.04027
	35~49세	0.143907	0.028614	-0.115293	-0.06913	-0.04721
	50~64세	0.157417	0.030514	-0.126903	-0.08281	-0.04538
	65~79세	0.423614	0.124145	-0.299469	-0.23867	-0.06420
	80세~	0.553227	0.303512	-0.249715	-0.25119	-0.00693
	65세 이상	0.454246	0.19384	-0.260406	-0.23628	-0.02851

주: 1. 2004년의 상대빈곤선을 2009년과 2014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B값이 더 낮게 나타남
2. (B-A)=C=(D+E)

2004년 상대기준선(702.75만원)을 기준으로 2009년과 2014년의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을 바탕으로 빈곤율의 변화를 소득증가에 따른 성장효과와 로렌즈커브의 이동에 따른 재분배효과로 분해하였다.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약 6.7%p의 빈곤율 감소가 있었으며 이중 5.85%p는 성장효과 1.02%p는 소득재분배에 따른 효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면 65~79세에서

15.34%p의 가장 높은 빈곤율 감소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중 12.51%p는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른 성장효과로 3.17%p는 재분배효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빈곤율이 11.83%p 줄어들었으며 이중 20.82%는 가구소득의 증가로 1.45%만이 재분배효과로 발생했다. 이는 80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빈곤율 완화효과가 낮고 특히 소득재분배효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 2.3%p의 빈곤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전체 빈곤율이 12.79%p로 2009년에 비해 빈곤율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중 8.7%는 성장효과로 4.23%는 재분배효과로 나타나 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⁸⁾.

V. 결론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 39%까지 10%p를 낮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연금수급자의 확대와 기초연금도입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감소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중·고령자가구의 소득구성의 변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노인빈곤율 완화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인구학적으로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지난 10년간의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과 재분배에 따른 빈곤율변화를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가구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09년, 2014년은 2004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중·고령기에 해당하는 50~64세 근로소득의 점유율과 상대적 기여율의 경우 2004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 기여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로 소득원천으로 근로소득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자의적 또는 타의적 이탈은 가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만 특별한 소득지원정책의 부재로 노인빈곤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65~79세 노인층에서는 근로소득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상대적 기여율은 높아져 전기노인의 빈곤완화를 위해 노인경제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수급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비노인가구에 비해 사회보험소득의 비율이 높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그 비율은 낮지만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적이전소득은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지만 점유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상대적 기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둘째, 연령대별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상대적 불평등이 심각하며 점차 확

8) 성장효과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소득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대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높아질 수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50~64세의 중·고령자 근로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 역시 2004년 2.121에서 2009년 2.283, 2014년 2.687로 1보다 크고 점차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65~79세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크기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4년에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소득은 2004년, 2009년 그리고 2014년에 모두 1보다 작아 불평등도는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점차 크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의 수급자수가 많지 않고 급여액도 높지 않아 불평등도는 높지 않지만 20년 이상의 수급자수가 점차 늘어나 급여액과 수급자수가 증가하면서 불평등도는 더 심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이전소득도 2004년 음의 부호를 나타내 불평등도를 완화하다가 2009년 0.010, 2014년 0.034로 규모는 작지만 불평등도를 확대시키고 있다.

셋째, 빈곤율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별 인구비율에 따른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분해를 실시한 결과 각 기간의 빈곤율 감소는 각 연령대의 소득변화에 따른 효과로 인구변화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빈곤율 강화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연령대간의 빈곤의 변화가 평균소득수준의 차이인지 소득불평등의 차이인지 규명한다.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약 6.7%p의 빈곤율 감소가 있었으며 이중 5.85%p는 성장효과 1.02%p는 소득재분배에 따른 효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전체 빈곤율이 12.79%p 감소하여 2009년에 비해 빈곤율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중에 8.7%는 성장효과로 4.23%는 재분배효과로 나타나 재분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재분배정책보다는 개인의 근로와 자산에서 발생하는 성장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에 빈곤층이 되기 전에 중·고령기에 이미 소득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특히 55~64세의 경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빈곤율 상승은 경제활동상태와 연계되어 있어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중·고령기의 경제활동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동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중·고령기에 공적연금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구 구성의 변화는 전체 빈곤율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했으며, 소득재분배는 성장효과에 비해 낮았지만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의 인구고령화는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수급자수 증가와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기초연금액을 고려하면 OECD 수준의 노인빈곤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